

# 민주, 당직 인선 마무리... 이재명 2기 체제 본격 가동

### 정성호·안규백 '친명 중진' 인선 조승래 "실무진으로 본격 가동" 2기 출범 맞춰 친명계도 재정비 '미래정당혁신연구회' 창립총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기 체제가 본격 가동된다.

이재명 대표는 26일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5선 정성호 의원을 인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정부직 당직자 추가 인선을 단행했다.

이로써 '이재명 2기 체제' 주요 당직 인선이 마무리됐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추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당대표 총괄특보단장에는 5선 안규백 의원이 임명됐다.

인재위원회 위원장에는 정 의원이 기용됐고, 인재위 부위원장은 3선 김병기 의원이 발탁됐다.

수석사무부총장에는 재선의 임호선의원이 임명됐다.

앞서 이 대표는 사무총장 김윤덕·정책위의장 진성준·전략기획위원장 천준호·비서실장 이해식·정무조정실장 김우영·수석대변인 조승래·조직사무부총장 황명선, 대외협력위원장 김현정 의원 등을 임명했다.

조 대변인은 "주요 당직자 인선이 끝나 이재명 대표 2기 체제가 본격 실무적으로 가동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2기 체제 출범에 맞춰 친명

계도 조직 재정비에 나섰다. 이 대표 대선 행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비전 및 정책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국회 연구단체 '미래정당혁신연구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연구회는 당내 최대 친명 조직 더민주혁신회의의 소속 현역의원이 주축인 모임으로 향후 정당정치 혁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대표 의원을, 권향엽·김동아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았다. 회원은 민주당 의원 40명, 조국혁신당 의원 1명 등 총 41명이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일반 당원이 500만명, 당비를 한 번이라도 낸 당원이 255만명 정도인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

려운 거대 정당"이라며 "기존 원내 중심 정당, 혹은 엘리트 정당과의 충돌 혹은 이견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 고민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 민주주의의 강화 흐름과 함께 직접 민주주의의 욕구를 조화시키는 것 역시 정당 정치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며 "정당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길, 미래 정당은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고 전했다.

김동아 의원은 "혁신연구회는 국민 요구와 사회 변화에 따른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입법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만든 연구단체"라며 "미래 정당을 설계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확대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혁신연구회 창립은 혁신회의의 조직 개편의 일환이다. 친명 원내 조직이었던 혁신

회의는 4·10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대거 배출하며 당내 최대 계파로 부상했다. 이후 원내와 원외가 분리돼 운영돼 왔는데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당 현안을 주도해 계파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강성 이미지가 이 대표의 대권 행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조직 구조 등에 대한 개편 논의에 들어갔다.

혁신회의 측은 "협력의원단은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전환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정책 연구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재정비하자는 취지"라며 "원외조직도 '정책과제별 위원회'를 설립해 집권 담론과 정책 의제 중심 활동을 해나가자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 김원이, 김산업 활성화 등 5개 법안 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사진)은 26일 김 종자 육성 및 김산업 진흥을 위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총 5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산업 육성법 개정안은 김과 김 가공품의 기술개발 및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법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김산업의 첫 단계인 종자 배양부터 이후 김 양식·가공·수출 등 전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은 지방의대에 지역인재 전형으로 입학한 사람의 졸업 후 취업 현황을 국가가 조사해 의료인력 양성 정책과 연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은 생수 제품(먹는샘물)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즉시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환경부장관이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정당 주회 행사에 참가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식사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또 정당이 주최하는 당원교육 프로그램 강사로 등을 해당 강사 및 관련 기업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하도록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여야 공방으로 잠시 정회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뉴스

## 문금주 "정부 공공비축미 물량, 농협 구곡으로 구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사진)은 26일 "정부가 농가에 배정돼야 할 신곡 공공비축미 물량을 농협 재고인 2023년산 구곡을 매입해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올해 공공비축미 45만 톤에는 지난 6월 발표한 농협 재고 구곡 5만톤과 밥쌀용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루쌀 4만톤이 포함돼 실제 올해 농가에 배정될 신곡 공공비축미 물량은 36만톤 뿐이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지난 2022년(45만톤)과 2023년(39만4000톤)에 비해 농가에 배정될 공공비축미 물량이 턱없이 줄어들었



다"며 "지금까지정부가 공공비축미를 구곡으로 매입한 전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공공비축미는 쌀 재배면적이 줄었다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쌀 소비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구곡이 아닌 신곡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을 호도하고 눈가리는 실효성 없는 대책을 당장 중단하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쌀값 안정대책인 시장격리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서임석 시의원 "광주시, 전기차 화재 예방책 부족"

미래차 선도도시를 선언한 광주시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임석 광주시의원(남구·사진)은 26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는 2030년까지 친환경 자동차 보급률이 20% 늘어나는, 정부보다 5년 빠른 2045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전기차 화재 건수는 날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특수소화장비 없이는 진압이 어려운 만큼, 주요 공공장소와 다중이용시설에 정부 인증을 받은



전용 소화장비를 배치해야 한다"며 "전기차 충전기 관리 위탁업체의 전문성도 재차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기차 충전기 화재 예방 업무의 효율화도 거론했다.

서 의원은 "광주시의 전기차 충전기 화재 예방 업무는 기후대기정책과에서 하고 있다"며 "화재 관련 업무는 전문성을 갖춘 소방 담당 부서나 시민안전 관련 부서에서 관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 여야, 김문수 청문회 시작부터 고성 얼룩

### 국힘 "사과 강요하나" 민주 "자진 사퇴하라"

26일 열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여야 의원 간 고성으로 얼룩졌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여당은 야당 의원들이 의사행발언을 통해 김 후보자의 거취를 압박하고 나선 점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언성이 높아졌고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개의 40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언행을 문제 삼으며 사과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 추모를 두고 죽음의 굿판이라고 했고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망언을 했다.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고통을 드린 망언에 대한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 후보자로서 부적격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홍배 의원은 "청문회에 앞서 후보자가 제출해야 될 의료 기록 협조를 요청했는데 사생활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후보자가 보인 발언과 행동들이 일반인의 상식을 벗어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질병 등의 이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으면 공무원(임용에) 제한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문회 시작 전부터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김 후

보자를 감쌌다. 임이자 의원은 "후보자도 할 얘기가 있을 것이라 본다. 일방적인 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우재준 의원은 "(야당이) 후보자의 의료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정신병력에 대한 조사를 하려는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공격하듯 육적인 발언"이라며 "이재명 대표만 해도 막말로 문제된 게 많다"고 말했다.

청문회는 여야 간 시간 협의 이후 약 20분 뒤 재개됐고, 안 위원장은 야당의 사과와 자진 사퇴 요청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아직 선서도 하지 않았다"며 "사과하는 건 때도 아니고 맞지도 않다"고 답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여야, 내달 2일 정기국회 개회식... 10월 7~25일 국감

여야는 26일 다음달 2일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기로 합의했다. 오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9월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된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다음달 2일 2시에 예정된 개회식을 시작으로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시작된다. 이후 4일과 5일 오전 10

시에는 각각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다.

9~12일 오후 2시에는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총 11명의 의원이 질의자로 나설 예정이다. 9월 정기국회 본회의는 26일 열리며, 이후 10월 7일부터 25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야당이 추진해온 22대 국회 개원식은 불발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민주당은 정기국회 개회식과 개원식을 함께 치르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배 원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회식 참석 여부에 관한 질문에 "9월2일 열리는 행사는 개회식"이라며 "통상적인 정기국회 개회식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 원내수석은 "22대 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개원식을 하지는 입장이었다는데, 여당 측의 사정이 있어서 개회식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